



국무총리, 국내 최초 민간주도 전남광주신안군 소재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지(96MW) 현장 방문

- 해상풍력, 향후 호남권 반도체·AIDC 등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원으로 활용
-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개최…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본격 추진

□ 한성숙 국무총리는 핵심 국정과제인 ‘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’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**메가프로젝트** 전력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**해상풍력**의 보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**향후 확대 방안**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.

□ 한 총리는 8월 13일(목) 오후,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민간 최초·최대 규모인 **전남해상풍력(96MW)**의 유지보수 센터 및 발전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* (참석) 한성숙 국무총리,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,
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, 김태성 신안군수 등

□ 한 총리는 전남해상풍력 사업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“전남해상풍력은 국내에서도 100MW급 대규모 해상풍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”이자 “향후 ‘해상풍력 메카’로 조성될 서남해 해상풍력 확산의 시작”이라고 평가했다.

○ 이어 “주민참여를 통해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은 향후 타 사업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언급하였다.

□ 특히, “해상풍력은 야간에도 발전이 가능하고 겨울철 발전량도 높아 태양광과 병행해야 할 필수전력원”으로 평가하고,

○ “우수한 역량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해상풍력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이후 선박을 타고 해상 발전설비로 이동한 한 총리는 1기당 10MW급 초대형 발전설비를 직접 살펴보고, 주요 기자재와 설치 과정을 청취하였다.
- 한 총리는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, “전남·광주는 풍부한 풍황, 얕은 수심 등 해상풍력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”고 평가하며, 서남해 지역의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-지방정부-기업 간 새로운 협력 성공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마지막으로, 한 총리는 “정부가 추진중인 반도체, AIDC, 퍼지털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등을 활용한 풍부한 청정전력 확보가 필수적”이라고 강조하며,
 - “해상풍력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첨단산업의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 - 아울러 “하반기 중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정부·지방정부 주도의 입지개발, 수용성 확보, 인허가를 단축하는 방안(계획입지제도)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	책임자	과 장	김도현 (044-200-2216)
		담당자	사무관	유용상 (044-200-2218)
	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	책임자	과 장	권기만 (044-201-7760)
		담당자	서기관	최승효 (044-201-7752)

참고

전남 해상풍력 사업 개요

□ (사업 위치)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(약 21.2km²)

□ (사업 규모) 총 96MW(지멘스가메사 터빈 9.6MW×10기)

□ (총사업비) 약 8,700억원(자본 33%, 차입 63%, 주민참여 4%)

□ (사업자) SK E&S 51%, CIP 49%

* 양사가 협력하여 후속 2·3단계(각 399MW) 사업도 추진 중('21.2월 발전허가 획득)

□ 주요 경과

- '17.9월 발전사업허가 취득
- '22년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선정
- '23.5월 공사계획인가
- '24.12월 건설 공사 완료
- '25.5월 종합 준공 → 상업운전 개시

